

## '02년도 3/4분기 한우 도축검사 실적 및 향후전망

구분	한우 도축검사 실적 (단위:두,천수)					도살 평균체중 (단위:kg)			
	계	한우	유우 (젖소)	육우	교잡우	한우	유우 (젖소)	육우	교잡우
1/4분기	158,750	116,412	39,800	2,051	487	552	601	636	599
2/4분기	148,644	101,466	45,114	1,692	372	569	606	661	603
3/4분기	172,490	126,867	42,471	2,573	579	563	621	684	603
누계	479,884	344,745	127,385	6,316	1,438	562	608	660	600

### ■ 9월 사육두수 146만두로 증가

2002년 9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146만 1천두로 3개월 전에 비해서 1만3천두(0.9%) 증가, 2세이상 암소두수는 54만 6천두로 3개월 전과 동일하였다.

9월 50두 미만의 소규모농가수는 21만 4천호로 3개월 전에 비해 6천호 감소, 50~100두 규모는 3개월 전과 동일한 3천1백호, 100두 이상 규모는 1천 2백호로 3개월 전보다 1백호가 증가하였다.

한육우 사육두수 감소추세가 진정되어, 2002년도 7~9월 배합사료 생산량도 66만톤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연초부터 높게 형성되었던 송아지 산지가격이 7월부터는 230만원대를 상회하고 있어 암소사육농가들의 번식의향은 높아지고 있다.

6~8월 한육우 암소도축률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26% 정도 하락하였고, 한육우 인공수정률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2.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의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태어날 송아지두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육우 사육두수는 계절적 요인으로 올 12월 143만두, 내년 3월 142만두로 감소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각각 2만두와 5만두가 증가할 전망이다.

전년동기에 비해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농가 번식의향이 높아져, 7~9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26% 감소한 15만 2천두였다.

올 7~9월 쇠고기 수입은 계속되는 한우 산지 가격 강세로 2001년 동기간에 비해 103% 증가, 2000년 동기간에 비해 8% 증가한 7만 7천두였다.

1~9월 쇠고기 수입은 미국산 65%, 호주산 24%, 캐나다산 4%로 미국산 고급육의 수입비중이 전년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송아지가격이 상승하여 전체 출하두수 중 암소 출하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초까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한육우 도축두수는 9~11월에 전년 동기대비 22% 감소한 13만7천두, 올 12월~내년 2월에는 이보다 약간 감소한 13만 5천두가 될 전망이다.

추석을 전후로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우 산지가격은 상승하였고, 이러한 상승추세는 11월 중순까지 지속되고 있다.

한우수소(500kg)가격은 11월에 440만원대, 암소는 450만원대까지 상승하였다. 산지 송아지 공급부족으로 수송아지가격은 240만원대까지 상승하였다.

산지가격 상승은 등급간 가격차이를 축소시켜 거세우 비육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작아지고 있어, 향후 고급육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11월 한육우 도축물량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23% 감소하여, 한우수소가격(500kg)은 전년 동기간(405만원)보다 약간 높은 410~440만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12월~내년 2월 한육우 도축물량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9% 감소하나 쇠고기 수입증가로, 한우수소가격은 전년 동기간(425만원)과 비슷한 410~440만원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 ■ 물량부족으로 한우 산지가격 상승세지속

한우수소(500kg)가격은 11월에 440만원대, 암소는 450만원대까지 상승하였다. 산지 송아지 공급부족으로 수송아지가격은 240만원대까지 상승하였다.

산지가격 상승에 따른 등급간 가격차이 축소로 거세우 비육에 대한 경제적 유인은 작아지고 있어, 향후 고급육 생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12월~내년 2월 한육우 도축물량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9% 감소하나 쇠고기 수입증가로, 한우수소가격은 전년 동기간(425만원)과 비슷한 410~440만원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 한우안테나 - News

### □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위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 리오에서 열린 OIE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구제역은 청정국으로 복귀됐지만 아직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어 대일 돈육 수출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조기에 돼지콜레라 근절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이 우리나라가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기는 지난 6월15일 마지막 발생한 이후 5개월여만이다.

【축산신문 12.2일자】

### □ 2백20여만원짜리 수입생우 경제성 없다

두당 2백20여만원에 수입된 생우는 현재의 육우가격을 놓고 볼 때 수익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지역의 한 농가에 따르면 최근 육우 B2등급의 지육 kg당 가격이 7천6백원이라고 보면 지육 4백kg일 경우 두당 3백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지육율이 60%라고 보더라도 생체중이 7백kg이상이어야 하며 육질 등급이 평균 B2등급이 나온다는 전제조건에서이다.

두당 3백만원의 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생우 구입단가 2백20만원(생체 4백kg)과 8개월 이상 사육하는데 따른 사료비 60만원, 여기에 약품비, 톱밥비용, 전기료 등 제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수입생우는 생체중 4백kg짜리가 2백20만원 정도 하는 것에 비해 국내산 육우는 생체중 5백kg일 경우 1백82만원 정도인 점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수입생우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산 B2등급과 근접한 초이스급의 지육(4백kg)을 들여오는 단가가 2백50만원 정도인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수입생우로 들여와 사육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축산신문 12.2일자】

### □ 전남 영암군 염재선씨 출품한우 최우수상

전남도가 11월25일부터 28일까지 농협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개최한 '2002 전라남도 한우고급육품평회'에서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에서 한우사육을 하고 있는 염재선씨가 출품한 6백90kg의 거세우가 육질과 육량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영예의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축산신문 12.2일자】

### □ 가축공제사업 재개

지난달 말 정부 지원예산 전액이 집행되면서 중단됐던 가축공제사업이 재개됐다.

농림부는 지난 21일 가축공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가예산 14억1천9백만원을 확보해 사업주관기관인 농협중앙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가축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은 당초 73억1천8백만원에서 87억3천7백만원으로 늘게됐다. 정부는 양축농가들이 가축공제에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축산신문 11.26일자]

### □ 육우고기값 한우 절반수준

한우와 육우의 가격차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등급일 경우 한우가 100일 경우 육우는 7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한우가 100일 때 육우는 그 절반 수준인 50으로 떨어졌다.

농협 서울축산물 공판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육kg당 한우 가격에 대한 육우 가격은 A2등급의 경우 한우 1만5천3백99원에 육우 7천2백64원으로 4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A3등급의 경우 한우 1만4천3백50원에 육우 5천9백52원으로, 42%, B2등급의 경우는 한우 1만4천5백58원에 육우는 7천1백51원으로, 49%, B3등급의 경우는 한우 1만4천68원에 육우 6천2백82원으로, 45% 수준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육우가격이 떨어지면서 젓소 송아지 가격도 떨어졌는데, 젓소 송아지(초유떼기 수)의 경우 지난달에는 62만원 정도 하던 것이 이달 들어서는 52만원 선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거래도 침체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육우 가격이 떨어지고 동시에 젓소 송아지 값이 하락한 것은 수입육의 물량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영향과 수입생우가 들어와 사육되고 있어 육우 사육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분석되고 있다.

[축산신문 11.22일자]

### □ 수입생우저지비상대책위, 태평농장 사료 소량씩 구매 감시 강화

한우협 수입생우저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수입 생우에 사료를 공급하는 사료업체에 대한 사료불매운동으로 일단 사료업체를 통한 대량 사료 공급이 차단되자 수입 생우를 사육하고 있는 태평농장에서 사료를 조금씩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소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사료명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태평농장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1일 2교대로 24시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감시활동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다른 농장에 판매된 사료가 태평농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수입생우에 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료에 대해 불매운동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11.22일자]

### □ 내년 수입조사료 쿼터 감축영향

내년에는 수입 조사료 쿼터량 감축에 따른 영향으로 조사료 구입난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확보대책이 적극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올 수입 조사료 쿼터물량을 43만4천톤으로 정해 놓고 이중 2만1천7백톤을 유보함에 따라 실제적인

을 키테량은 41만2천3백톤에 불과한데다 내년에는 국내에서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물량인 8만톤 정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사료 확보난에 대해 농림부는 겨울철 대규모 담리작 사료작물재배를 조성하고, 경사·구릉지와 휴경지 등 밭을 사료로 이용,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토록 하기 위해 호밀·호맥 등 종자와 비료 및 1차년도 농지임차료 전액을 보조해 줄 계획이다.

특히 볏짚 및 농업부산물 등의 사료자원화 이용을 위해 벼 재배 생산농가와 연계한 생볏짚 사일리지 제조를 이용토록 하고, 볏짚 베일러(결속기) 등 기계·장비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볏짚의 암모니아처리에 의한 사료가치 증진을 위해 암모니아 가스는 50% 보조지원하되, 비닐은 자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11.19일자】

#### □ 축산자조금법 시행들어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일명:축산자조금법)이 14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우자조활동자금·양돈자조활동자금·낙농자조활동자금·산란계자조활동자금·육계자조활동자금과 이와 각각 유사한 명칭도 사용해선 안된다.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축산업자로부터의 거출금과 축산법에 의한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의 축산관련 영업자의 지원금과 자조활동자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축산자조활동자금으로는 축산물 소비홍보와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며,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축산신문 11.15일자】

#### □ 남동농협 강도높게 응징키로

부천축협문제가 전무와 공장장 사퇴, 전문지에 사과문 게재, 조합장 사과 등으로 일단락 됐다.

수입생우저지투쟁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선)는 지난 8일 안성 농협연수원에서 시·군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부천축협의 이 같은 안을 수용키로 했다.

수입생우에 사료를 직접 공급한 남동농협에 대해서는 지난 5일 50여명이 항의 방문해 4대 축산전문지에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김정웅 감사의 제명, 추후 사료공급 중단 등을 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태평목장 대표인 수입업자가 남동농협의 현 감사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르고 사료를 공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해외출장중인 조합장이 돌아오는 대로 부천축협 이상의 강도 높은 응징을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이에 대한 책임을 농협중앙회에도 묻기로 했다.

이날 김병선 위원장은 "수입생우문제는 한우농가와 육우농가만의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축종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강조하고 "국내 축산업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단체협의회에서도 비대위의 사료불매운동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11.12일자】

### □ 축단협, 생우수입 저지투쟁 지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6일 한우협회의 '생우 수입 투쟁'을 지지하며, 한우협회가 취하고 있는 수입 생우에 사료를 공급한 업체에 대한 사료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은 이날 '한우협회의 생우 수입 투쟁에 대한 축단협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우농가의 생우 수입 저지 투쟁은 한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을 유지발전시키려는 수입 개방시대 양축농가의 자발적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수입 생우 문제는 한우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모든 축산농가의 문제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축단협은 특히, "생우 수입으로 인해 한우 산업이 위축될 경우 한우 고기 시장을 값싼 수입 쇠고기가 점차 잠식하고, 그 여파가 수입쇠고기의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 잠식으로 이어져 결국 국내 축산 기반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생우 수입 문제가 전축산인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축산신문 11.12일자]

### □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서도 의무화돼야

농림부는 지난 99년 보건복지부와 협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었으나 관계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두 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을 하지 못한 것.

외통부는 음식점에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면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법정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입법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외통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국제적 사례가 없는데다 축산물만을 한다는 것도 수입제한 조치 등의 문제가 있음을 들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원산지 표시를 규정하는 것은 법이 규율하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개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외통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외국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국내 축산농민과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됨을 거듭 촉구했다.

[축산신문 11.8일자]

### □ 한우 거세기피 방관 안된다

소값 상승에 따라 올 들어 거세우와 비거세우간 경락값 차가 좁아진 데 따라 사육농가들이 거세 사육을 기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거세장려금을 지급받은 한우 사육마리수는 3만6,85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9,000여마리에 비해 38%나 줄었다.

[농민신문 12.2일자]

#### □ '목초탄' 한우에 급여 육질개선 효과 '뚜렷'

한우에 백탄 숯가루 80%와 목초액 20%를 섞은 목초탄을 먹이면 육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림청 임업연구원과 건국대 동물자원연구센터 한우연구팀 김종민 박사가 실행한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탄 숯가루와 목초액을 혼합한 목초탄을 한우에 먹이면 육질이 개선되고 육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연구팀은 소의 농후사료에 백탄 숯가루 80%와 목초액 20%를 섞은 목초탄을 1% 첨가해 출하 4개월 전부터 급여한 결과, 이를 급여하지 않은 소보다 육질 등급이 특등급인 1와 1등급 출현율이 25%나 증가했으며 육량 A등급 출현율도 1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연구팀 관계자는 “한우를 대상으로 목초탄을 급여할 경우 육질 등급 개선은 물론 암모니아 발생이 줄어 분뇨 냄새도 적어진다”며 “사육농가들은 백탄 숯가루와 목초액을 구입해 섞어 사용하면 이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12.2일자]

#### □ 송아지 거세적기 당국·농가 '차이'

농림부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수송아지 거세 적정 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한우농가들은 송아지 거세를 정부 권장시기인 3~4개월령보다 늦은 5~8개월령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가 최근 전국 한우 고급육 생산 농가 79명을 대상으로 사양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송아지 거세시기가 5~6개월령이라는 농가는 전체의 54%인 43명이었으며, 7~8개월령이 27%, 9~10개월령 이상도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축산연이 그 동안 권장해왔던 3~4개월령은 전체의 9%인 7명에 불과했다. 이같이 거세시기가 정부 권장시기보다 늦은 것은 상당수의 한우 비육 농가들이 젖 때는 시기를 막 지난 4~5개월령짜리 송아지를 구입, 한달 정도 안정기간을 거쳐 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농가 87%가 유휴거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우농가의 거세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보편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신문 11.29일자]

#### □ 한우농가 사료공급 차단 '고삐' 수입 법인연합 법적대응 검토

10월22일 농장에 입식된 호주산 생우 563마리가 입식 한달을 지나면서 확보해뒀던 배합사료도 거의 바닥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농가들이 이 농장에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계속하고 있어 생우 수입을 주도한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가 사료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수입생우 사육현황=경기 화성 소재 농장에서 한달 이상째 사육중인 수입생우는 현재 한마리당 생체중이 480~490kg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병룡 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수입생우는 현재 일당 증체량이 1.2kg 내외로 잘 자라고 있으며, 폐사된 소는 아직 없다”며 “앞으로 생체중 700kg까지 사육, 자체 판매망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11.27일자]

### □ 농경연 발표 '4분기 축산관측' -한·육우

번식의욕 높아... 사육수 늘고 송아지값 강세

한우농가의 번식 의욕이 높아지면서 사육마리수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인공수정 실적이 전년 같은 달보다 높았고, 암소 도축률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 12월~내년 2월에 태어날 송아지 마리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올해 12월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계절요인으로 9월의 146만1,000마리에 비해 2.1%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2만마리나 늘어난 143만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년 3월에도 사육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5만마리 증가한 142만마리에 달할 전망이다.

한우 큰수소(생체 500kg 기준)값은 사육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쇠고기 증가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410만~440만 원의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송아지값도 공급 부족으로 당분간 강세가 예상된다.

[농민신문 11.25일자]

###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가닥'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가 소는 2,000원, 돼지는 400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금까지 축산발전기금 전액 지원을 통해 그동안 축산농가에는 부담이 없었던 축산물 등급판정을 내년부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에 따라 유료화하기로 하고, 수수료액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금액으로 결정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축산농가들이 부담하는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는 소는 12억원(예상마리수 60만마리), 돼지는 56억원(예상마리수 1,400만마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신문 11.22일자]

### □ 방역소홀 축산농가 처벌 엄해졌다

농림부는 지난 4월 강원 철원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주인 신아무개씨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씨는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돼 죽은 돼지를 개 사료용으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또 11월7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기 김포 양돈농장주 유아무개씨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김포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대해 소독설비 구비와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사축을 소각·매몰하지 않고 가축사료로 유통하는 등 방역규정 위반시에는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살처분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가축 사체의 소각 및 매몰 규정 위반자, 질병발생 신고를 안한 소유자나 관리자, 사육시설의 격리 및 폐쇄명령 위반자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독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민신문 11.22일자]